

인간 이 지닌 큰 재능중의 하나는 현실생활에서 희망을 가질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으로 인해 인간은 주변의 모든 세상이 허물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힘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세상사람들이 영구적인 평화를 갈망하는 것도 인간의 강렬한 희망중 하나이다. 문제는 항상 그래왔듯이 「평화를 달성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최근 나토의 장래에 관한 주제로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던 토론회에서 주요 전략사상가들은 유럽의 오래된 안보구조가 붕괴되었으며,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위협을 내포한 군사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이의 代案으로서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에 기반을 둔汎유럽 안보조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많은 장애요소들을 도외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첫번째 것은 CSCE의 성격이 회의라는 점이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 유럽국가와 미국 및 캐나다를 포함한 35개 참가국은 1975년 헬싱키에서 최종 규칙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서 인권과 경제협력, 안보균형에 관한 합의를 표명하였다.

사실상 그 규칙은 소련이 자국 인권에 관련한 서방측의 간섭을 경제협력 증대 및 전후 유럽 국경의 승인이라는 점과 맞바꾼 거래였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국가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엄격한 전제공산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으므로, 서방측에서는 이를 통해 소련과 그 동맹국들의 인권침해를 저지할수 있었다. 더구나 서방측 국가들이 번영하고 동구국가들이 쇠퇴함에 따라 경제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샤바조약국가들은 그들의 국민들을 전과 같이 다루었고, 한가지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한가지 특별한 일이란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집권이다.

뒤이어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이 애초부터 소련 지도부에서 의도한 것인지는 지금 별다른 관심사항이 되지 않는다. 고르바초프가 위성국가의 정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 결과로서 이들 국가의 공산당은 자신감과 권력을 상실하였고, 인권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CSCE이 역할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지금 CSCE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법과 협정위반이 생길수 있는 논쟁장이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다. CSCE를 통하여 신뢰구축을 위한 협정이 작성될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으로는 유럽 재래식전력(CFE) 감축을 위한 비엔나협상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5개 전 참가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여러면에서 이들 국가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현재로서는 이들 모두가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순수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났었다.

인적 집단이 자신들의 영토 또는 다른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행사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가는 최근까지 철저한 중앙통제하에 있었던 지역에서 발생한 인종분규만 보아도 쉽게 알수 있다.

만약 CSCE가 단체로 되어 상설조직이 된다면 이는 단지 UN의 축소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나친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인류의 양심을 일깨울수 있지만, 유엔이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中東에서 일어난 인질사태를 저지할수 없듯이 그 행위를 중지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NATO와 같은 기구의 세력이나 권한을 결코 지니지 못할 것이며, 유럽안보기구로서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NATO를 해체시키자는 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한가지 주요 매력은 평화이며

금이다. 어떤 전문가는 NATO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6천억달러(美貨)로서, 이 돈은 궁핍한 동구국가 및 제3세계국가에 대한 원조나 비용부담국가의 사회복리와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수치는 근거없는 것이다. 6천억달러는 16개 NATO 국가의 총 국방비지출 금액에 해당된다(이중 절반정도는 미국의 국방비이다). NATO에 들어가는 비용—항공방위, 통신체계 및 항공기 격납고등과 같은 보편적인 군사활동에 필요한 하부구조용 자금뿐만 아니라 본부, 민간직원, 운영비를 포함하여 국제적 民·軍 조직들에 사용되는 비용은 이 금액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동맹기구가 없고 현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충당해야 한다면, 총 비용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금의 사용을 자유스럽게 했을때 이 자금이 것처럼 고상한 목표에 할당될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최근 한 청문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책정된 자금이 구호자금으로 돌려진다면, 자신의 유권자들은 그 자금을 부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냉담하게 지적하였다.

동맹의 해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종식이 역사이래 모든 국가나 민족이 보편적으로 지녀온 인류의 숙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와 같은 국가나 민족이 좌절하게 되거나 혹은 영토나 富를 필요로 하게 될때,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력사용도 불가피하였다.

각각의 국가는 그들의 영토내에서 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국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무력사용의 금지를 보장할수 있는 국제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직이 생길때까지는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나 동맹을 맺어 침략이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NATO가 바로 그러한 동맹이다. 그리고 무력발발에 대비하는 하나의 보험증서로서 NATO는 매우 저렴한 것이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에 의해 매우 강력한 무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全面戰은 고려할수 없다는 것을 믿을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견해는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한때 공중전으로 모든 전쟁이 끝날 것으로 여겨진 적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화약의 발명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핵무기가 실로 파괴적이고, 사용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궁극적인 금지기능을 행할수 있으리라는 것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재래식」 무기도 엄청나게 강력해졌으므로 억제력으로 고려될수 있다.

그러나 이는 타국이 그와 같은 무기를 사용 못하게 하고자 하는 국가는 스스로가 그 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만약 상대국이 동의한다면, 그때는 상호감축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군비통제가 아닌가? 이것이 군비통제라면 이와 같은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동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이것이 NATO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煥)

〈Miltech 90/5〉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모를 때가 좋았지

入社 5년째를 맞는 젊은 金대리는 하루도 거르지않고 끝까지 사무실에 남아 무엇인가 일을 하곤 했었다.

金대리에 대한 소문은 회사내에 자자하게 퍼져, 하루는 사장이 金대리를 특별상여금과 함께 승진시킬 요량으로 사장실로 불렀다.

「자네의 애사심에 정말 고마움을 느끼네」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맛벌이를 하는데, 제가 아내보다 일찍 귀가하면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